

정치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정 상 호*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정치를 연구와 실천 양면에서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며, 보다 체계적 담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의 생활정치 담론은 세 가지 방향에서 발전되어 왔다. 첫째, 일본의 생활정치는 한국 시민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핵심원리로 삼고 있다. 둘째, 하버마스의 이론, 특히 공공성과 생활세계의 개념들은 학계의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든스의 생활정치는 중도개혁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영향을 미쳤는데, 탈이념과 실용주의로 해석되는 인식을 낳았다. 한국에서 생활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를 상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주제어: 생활정치, 하버마스, 기든스, 공공성, 참여, 선택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1. 문제의식: 담론으로서 ‘생활정치’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

담론(discourse)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한 세기 전에 담론 또는 담론의 수단인 언어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능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학술계의 성찰로부터 시작되었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언어 연구자들은 언어를 의미교환 또는 정보소통의 도구로만 이해하였으며 담론은 이러한 언어적 도구를 통한 의미교환의 과정 정도로 파악되었다(van Dijk 1985). 그렇지만 푸코(Foucault 1972)가 담론을 ‘역사성을 가진 언어관습’으로 규정하고, 담론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 이후 해석학적 또는 현상학적 분석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최근 사회과학계에서는 담론이 일반 시민의 정치 인식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역사적 연구가 담론 분석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담론으로서 생활정치는 이중적이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것의 유래와 의미가 뚜렷이 이해되지 않는 낯선 개념이다. 한편 시민운동 활동가나 연구자, 일부 정치인에게는 어느덧 익숙해져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들 각각이 생각하는 생활정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최소한의 합의 없이 커다란 편차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연구는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정치를 연구와 실천 양면에서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며, 보다 체계적 담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일차적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담론 생산의 주체인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의 세 영역이 현재의 생활정치를 어떤 의미와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해명할 것이다. 또 담론 형성

의 세 주체가 이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세 영역의 담론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의 이론적 계기와 역사적 사건을 추적함으로써 담론의 발전과정과 기원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인식과 규범적 신념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담론”(Hall & Taylor 1998)이 되기 위해서 생활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안할 것이다.

2. 생활정치 담론 형성의 세 가지 궤적

1) 학계에 미친 하버마스의 압도적 영향

학계에서 생활정치를 처음으로 거론한 이는 하버마스였다. 하버마스는 국가를 체계(경제적 시장과 행정권력)와 생활세계를 나누고,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현대사회의 중심적 문제로 다루었다. 화폐나 권력과 다른 원리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공론장으로서 생활세계가 존재하며, 현대사회에서 체계의 압도적 힘에 의하여 생활세계가 점차 식민화되었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소통이 절실하다는 그의 진단과 대안은 한국에서 생활정치를 이해하는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시재의 논문이다. 이시재의 연구는 단순히 생활세계 개념의 소개와 강조가 아니라 하버마스의 이론을 생활정치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공공성을 확장하는 시민의 정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의 공공성은 공권력과 관련된 공식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제한되

어 이해되어 왔다. 하버마스의 탁월함은 국가만이 공공성을 독점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항하여 시민적 공공성 개념을 제안한 데 있다. 공개적인 장에서 비판적 논쟁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공론장의 정치와 이를 통한 공공 영역의 민주적 확장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중심 영역이며, 생활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생활정치를 정치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구체적 생활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그 주체를 주체성, 연대성, 사회성, 역사의식을 갖춘 새로운 시민으로 규정하였다(이시재 1995, 24-26).

송정기 또한 ‘시민적 공공성’을 생활정치의 본질로 정리하였다(송정기 1995, 74). 그는 공공성의 담당자로서 국가와 행정기 아님 주민의 등장이 공공성의 구조 전환이며, 이러한 시민적 공공성은 생활권 속에서 공공성에 관한 논의 즉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행위의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스스로 자기 제한하는 것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시재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생활정치의 주체로서 보편적 시민이 아니라 참여와 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천(1995)의 해석 역시 하버마스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그는 자끄 비데(Jacques Bidet)의 논의를 빌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생산관계에서 이윤증식을 향한 노동정치(제1모순)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끊임없이 박탈하는 생활정치(제2모순)로 구분하고 최근 사회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두드러진 경향은 생활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60년대의 신사회운동과 70년대의 생태운동은 자본주의 소비양식과 그 생활의 기호,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자신 및 자연의 고강도 이용을 강제하고 욕망을 조작하여 온 즉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오재환(1996)은 생활정치를 계몽주

의적 자유주의 정치나 노동정치와 구분되는 것으로 생활세계에서 시민생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평화·생태·여성·지역자치 등 신사회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생활정치를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김기성(1999)의 연구이다. 그는 생활정치 즉 시민자치를 사회에서 공적인 것에 합의를 창출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중시하며 사회구성원들의 토론과 연대가 공적인 문제에 통제권을 갖게 되는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국가중심의 정치나 특정 집단 혹은 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이익정치와 달리, 반정치의 정치, 포럼의 정치(a politics of forums)이고, 시민이 공적인 것에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라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하버마스에게서 착상을 얻은 한국의 생활정치 연구는 시간을 경과하면서 점차 영역과 부문별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병두(1998)는 생활정치를 생태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공간의 정치로 설명하였다. 한편, 장미경(2002)은 생활정치를 중앙집권 정치와 대립하는 것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주장과 요구를 담아내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치형태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생활정치와 페미니즘은 참여민주주의와 자원성의 원리, 대안적 가치와 여성주의 가치, 공공성 문제에 대한 관심, 공적 영역 對 사적 영역, 제도 對 비제도 정치라는 이분들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결국 페미니즘을 생활정치의 핵심으로 보았다. 신동훈(2005)은 노사모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글쓰기를 아마추어들의 일상의 문학이자 참여문학의 한 형태로서 생활정치의 실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기든스 이론에 대한 정치권의 편의적 수용

(1) 기든스의 생활정치의 주요 내용

1990년대 초에 한국에 도입된 기든스의 주장은 학계를 거쳐 정치권에 더 큰 파급력을 미쳤다. 기든스는 기존 좌파의 이론들이 경제적 억압과 결핍의 극복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왔다고 비판하면서 급진적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6가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① 개인적, 집단적 삶의 조건을 재편하기 위한 연대성의 복구, ② 삶의 정치, ③ 발생적 정치(generative politics), ④ 대화(dialogue) 민주주의, ⑤ 지구적 빈곤과 복지국가에 대한 재검토, ⑥ 폭력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등이 포함되어있다(기든스 1997a). 특히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삶의 정치 즉 생활정치이다.

기든스는 정치를 해방의 정치와 생활정치로 구분하였다. 근대사회에서의 해방의 정치는 개인과 집단을 그들의 삶의 기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을 있는 일반적 전망을 지칭한다(기든스 1997b, 334). 해방의 대상은 종교와 전통의 교조적 명령이거나 기존 관습과 편견, 또는 계급 등의 부당한 지배가 해당된다. 해방의 정치의 본질은 지배와 종속의 계급, 착취와 불평등, 억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 타자의 정치, 분할의 정치, 위계적 권력정치이다. 반면 이와 대립된 것으로서 생활정치의 본질은 선택에 관한 정치이자 각 개인들이 자아(정체성)의 성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결정에 관한 정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활정치는 두 개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이 다루고 있는 의제이다. 첫째, 생활정치는 탈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던의 정치와 달리 일상생활의 도덕적 규범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의제는 생명의 권리, 낙태, 유전자 등 생물학적

재생산 문제를 중심 의제로 다룬다. 셋째, 지구화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협력을 강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생활정치는 협의적 의미로는 국가의 통치영역 안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제한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대립하는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논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다룬다. 해방의 정치와 생활의 정치의 주요한 차이를 다룬 것이 아래의 <표1>이다.

<표1> 해방정치와 생활정치의 차이

	해방정치	생활정치
1	전통과 관습의 고정성에서 사회생활이 해방됨	정치적 결정이 선택의 자유와 창조적 권력(변형 능력으로서의 권력)에서 나옴
2	착취, 불평등, 억압의 축소 또는 제거. 권력 자원의 차별적 분배와 관련됨.	지구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생활형식을 창조함
3	정의, 평등, 참여의 윤리가 제시하는 명령에 복종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과 관련된 윤리를 탈전통적 질서 속에서 실존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시킴

출처: 기든스 1997, 334.

다소 추상적인 기든스의 생활정치 논의는 그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발생적 정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발생적 정치를 ① 바람직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촉진시키는 것, ② 정부나 관련기관의 능동적 신뢰가 창출되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의 형성, ③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율성 부여와 개발, ④ 물질적 부를 포함하여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자원들의 산출, ⑤ 자율성의 인정과 하위로부터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정치적 권력 분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기든스 1997b, 110). 이를 요약하자면, 생활정치는 성찰적 시민들의 참여와 분권, 권능강화의 정치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대한 기든스의 진단과 대안을 정리한 것이 <표2>이다.

<표2> 단순 근대화의 해악과 대안

근대화의 제도적 차원	해악	대안
자본주의	경제적 양극화	탈결핍경제
감시	민주적 권리의 거부	대화민주주의
산업주의	생태학적 위협	인간화된 자연
폭력수단	대규모 전쟁의 위협	협상된 권력

(2) 정치권의 논의: 생활정치와 이념의 분리

정치권에서 생활정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30여년 만에 부활된 1991년 지방자치 선거인데, 일부 시민단체 후보들은 ‘생활정치’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92년 총선에서 야당은 물론 민자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표어로 활용하였고, 3당 합당 이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발로 뛰고 확인하는 현장정치, 주민위한 생활정치, 수권정당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체계적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실질적 개념이나 내용 없이 지역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수단으로 이용하였다(이기호 2003). 보다 보편화된 계기는 국정운영의 지표로서 세계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었다.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생활정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지향으로 인식되었다.

정치권에서 생활정치라는 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계기

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었다. 특히 기든스의 저서들이 잇달아 번역되면서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의 지표이자 정치개혁의 좌표로 제3의 길이 자주 언급되었다. 특히 이러한 연관성은 ‘제3의 길과 생산적 복지’로 정식화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1998년 8.15 경축사에서 공식 제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통해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는 참여민주주의, 자율적 시장경제와 함께 21세기 통합적 선진화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정부의 국정이념”이다(「한겨레신문」, 1998. 8. 16). 이처럼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근로연계복지 개념의 생산적 복지로 진화하였고(삶의 질 향상기획단 1999, 30-32), 나아가 사회정책을 넘어선 국정운영의 철학적 원리로 확장되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0). 그러나 이 시기까지 한국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수용한 것은 기든스의 추상적인 생활정치 개념보다는 복지정책의 구체 적용이 가능한 제3의 길이었다. 실질적으로 생활정치가 정치권에서 보다 본격화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 말기 대선을 전후한 시기였다.

되돌아보면 정치권의 논의에서 생활정치를 가장 빈번하게 이용한 세력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집권 중도세력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무튼 정치권은 탈이념의 정치를 생활정치의 본질로 이해하였다. 이 구(2007)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극단적 양분에 의한 이념정치를 지양하고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정부의 공공정책(환경, 부동산, 조세, 노동, 복지, 민영화 등) 결정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는 민주당의 강령이 환경·인권·

여성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탈산업사회에 부응하며, 지역·계층·세대의 갈등구조를 완화하는 탈계급정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실용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중도개혁정치라는 것이다.¹⁾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것처럼 보인다. 다음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직후 12명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탈이념 생활정치 선언: 이제 국민 속으로 가자

이제 대선 패배의 무기력함을 털고 새로운 진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중략) 우리는 새로운 진보란 낡은 이념에 대한 교조적 추종을 거부하고 국민의 작은 생활 속에서 진보를 구현해내는 생활밀착형 정치여야 함을 주장한다. 거대 담론과 선전성 정치구호로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일말의 지나 신뢰도 얻을 수 없음을 지난 대선 패배에서 배웠다. 새로운 진보, 생활밀착형 정치는 주거, 환경, 교육, 세금, 교통 등 국민의 삶 곁에서 구체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진보시키는 데에 주력하여 가깝고 작은 것으로부터 수권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길이다(<http://blog.naver.com/yeshoney/10028218149> 검색일: 2008. 3.1).

최근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이론적·정치적 수준에서 정립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5월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 등 좌우 이념을

¹⁾ 그의 논문은 한국 정당정치의 이론적 수준의 일천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인용하여 중도실용주의를 생활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의 결론은 분배 또는 사회정의보다는 기업과 경제성장 우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색채를 빼야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기술관료 중심으로 정책 중심을 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뛰어넘은 탈(脫)이념과 당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 운영 현대화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참여 네트워크 정당, 대안정당과 더불어 생활밀착 정당을 선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참여와 자율과 같은 어떤 가치보다는 복지와 일자리와 같은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찬 전(前)총리 역시 한 강연에서 “진보세력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돌보는 생활정치로 깊이 천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생활정치를 기초의료, 사회보장, 주거, 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로 설명하였다(「연합뉴스」, 2009. 5. 16).

3) 일본의 생활정치의 토착화 과정과 한국 시민운동에 미친 영향

연구자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생활정치가 서구에서 유래된 개념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생활정치의 종주국은 일본이다.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의 선거구호는 '생활자 주체의 정치'였고,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은 1992년에 생활대국을 국가목표로 내세웠다. 오늘날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슬로건이 '정치는 생활이다'(政治とは生活である), '생활 유신'(生活維新), '생활이 제일'(生活が、第一)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현대정치에서 생활정치라는 용어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또한 그 기원 역시 하버마스나 기든스를 한참 앞지르고 있다. 일본에서의 생활정치의 발전의 궤적은 세 가지의 경로를 따라 설명하는 것이 간명하다.

첫째는 학술적, 이론적 수준에서의 생활정치의 발전이다. 이미 종전 이전에 가고야마 게이(龍山京)는 생활을 사회과학 용어로 정착시키는

데 주춧돌을 놓았다. 그는 1943년에 『국민생활의 구조』를 통하여 전시 노동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로 생활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생활의 구조』(1947)에서 노동, 휴양, 오락, 교양의 네 가지를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제시하였고, 생활을 노동력의 유지와 확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어 나카하치 마사미는 노동력 재생산을 다루는 생활학을 발전시켰는데, 1956년에 『生活構造論』을 간행하여 생활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1972년에는 日本生活學會가 창설되었고, 지금까지도 『生活學』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이시재외 2005, 200). 요약하자면 일본에서 생활의 의미는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적 순환구조에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여 인간의 생명을 유지, 발전시켜가는 전체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쿠마 노부유키(大熊信行)는 생활구조를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행위의 유형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생활정치 발전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의 시민운동이었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두 줄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좌파계열과 야당계열이 주도하였던 중앙수준에서의 제도정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혁신자치제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제도 사회운동으로서 반핵반전운동과 생활운동이다(이기호 2003).²⁾

먼저, 중앙수준의 제도정치로는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을 휩쓸었던 혁신자치제의 영향이 컸다. 혁신자치제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획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민주주의의 정착과 혁신 정당의 통치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운동방향의 일대 전환

2) 이기호는 일본의 시민운동을 체제 내 운동과 체제 외의 운동으로 분류하였다. 통상 사회과학에서 체제는 레짐 수준의 구조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제도정치와 비제도 운동으로 구분하였다.

을 선언한 일본 사회당과 공산당의 인식 전환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막 성장하기 시작하였던 환경·주민·반핵평화운동 등은 혁신자치제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오재일 1998). 일본의 시민운동은 폐쇄적 정당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장벽 앞에서 독자적 출마보다는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택하였다. 선거 운동의 지원은 물론 당선 이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협력자로 활동하였다. 혁신계 단체장과 시민운동의 협력 속에서 지연·혈연의 단순한 세력다툼에 지나지 않았던 지방정치와 행정이 풀뿌리 혁신주의와 풀뿌리 보수주의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고 비로소 지방자치에 정치의 존재(政治의 新生)를 실감하게 해 주었다(김옥구 1996, 229).

그렇지만 일본의 생활정치에 정치적 실체와 사회적 합의를 부여하게 만든 결정적 동력은 생활클럽에서 시작되어 가나가와 네트워크로 발전한 지역주민운동이었다. 일본의 생활클럽은 한때 사회당 당원이었던 이와네 쿠니오에 의해 1965년에 설립되었다. 목표는 소비생활의 장으로부터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문제제기하여 자신의 생활방식, 일하는 방식을 동료, 특히 주부 등과 함께 바꾸어나가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었다(박희숙 2005). 주목할 점은 처음부터 단순히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 조직이나 환경개선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거대한 정치나 경제체제에 종속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의 주체로서 삶의 방식을 개조하는 대안적 사회운동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이시재 외 2005, 217). 생활클럽운동은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발전하게 된다. 이와네 쿠니오는 1977년 사회당 탈당과 동시에 대리인 운동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생활클럽 생협의 이념과 주장을 지역과 의회에 확대하여 지역정치와 국가체제의 변혁을 지향하기 위함이었다.

이중 눈여겨 볼만한 것이 도쿄 남쪽에 있는 인구 850만 명의 현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본 생활정치의 대명사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이하 네토)이다. 네토는 1984년 요코타 카즈미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산업중심주의적인 사회 그 자체에 있다고 보고 시민 스스로가 생활의 질을 문제제기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지향하는 도전을 계속함과 동시에 그러한 시민을 늘려가는 것이 네토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요코타 카즈미 2005, 61). 네토의 특성은 단순한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직업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를 실현해가는 정당운동을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대리인 운동으로 유명한 네토는 25년째 존속(84년에 결성)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당사에서 네 번째로 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다.³⁾

일본의 생활정치 발전사는 한국의 시민운동에 세 가지 방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생활정치를 최초로 한국에 소개한 시민단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었다. 일본에서 생활정치를 일찍이 발견하고 실천한 집단이 ‘생활클럽생협’이라 연관성이 컸고, 87년 민주화 이후 양국의 생협 단체들의 교류와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생활정치의 지향과 사례가 <한살림> 소식지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생협들은 생활정치를 국내에 적극 소개하였지만 그것을 모델로 삼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협동조합의 정

3) 네토는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3년 선거에서는 전국(국정)정당을 표방하고 J-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민주당과 정치계약을 맺고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회원과 지역 네트워크의 반발, 연합 대상인 민주당으로의 종속 가능성과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13인 중 단 2명만 당선되는 참혹한 결과를 얻었다. 이후 다시 시민의 정부 노선, 즉 로컬 파티는 로컬정부를 수립하여 로컬정권을 만드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며 원래의 노선으로 복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희숙(2005)를 참조.

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의 법적 제약(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 때문이다. 또 다른 영향은 여성단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1995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여성후보의 지방의회 진출과 비례대표제 확보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여성의원들을 배출하여 지방정치를 혁신해갔던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한국의 여성단체들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 인식되었다(이기호 2003). 최근에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경우처럼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한일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일본의 대리인운동이나 로컬 파티에 대한 국내 여성단체들의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8. 9. 3). 마지막으로 일본의 생활정치는 지역 시민단체의 사업과 정치적 상상력에 영향을 미쳤다. 제도와 운동의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의 차이를 분석한 홍일표·하승수의 연구(2004)에 따르면, 지방차원에서는 오랜 자치의 역사를 갖는 일본이 더 발전된 제도와 운동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생활정치의 또 하나의 사례인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나 조례제정 청구와 정보공개운동 등은 지역 활동가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토호들이 장악한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일본식의 로컬 파티 실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하승수 2002; 정태호 2008).

3. 비교의 관점에서 본 생활정치 담론

1) 공통점: 생활정치 담론의 대두 배경과 원리

한국이든 외국이든 생활정치는 이론이나 운동으로서 확고히 정착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발전과 변형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의 공통된 배경과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먼저, 그것이 대두된 배경에는 두 가지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

생활정치가 탄생한 첫 번째 배경은 거시적으로는 양적 성장 중심의 근대화 또는 ‘고삐 풀린 경제발전 과정’(기든스 1997a, 350)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유럽의 신사회운동은 생활정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은 서구에서 네오 코포라티즘 전략에 따라 노사정 삼자협약 체제 내에 흡수된 노동운동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제한과 조직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를 비항하면서 등장한 여성, 인권, 빈민, 도시, 문화, 생태, 환경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서두원 2001, 373). 신사회운동을 촉발한 68혁명도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로 무장한 세대와 운동을 가져왔다. 유럽에서 68혁명 이전의 모든 사회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물질적 풍요와 계급해방과 같은 분배적 정의에 있었고, 정당과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이라는 거시 이데올로기적 기획을 지향하였다. 신사회운동과 더불어 여성·소비·환경·인권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가 부각되었고 자율화·분권화·다원성을 강조하는 차이의 정치와 삶의 현장과 밀착된 생활정치가 중시되었다(오재환 1996, 107). 최근 생활정치를 표방한 일본 민주당의 승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의 승리 요인으로는 자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실망과 변화의 욕구가 일차적 원인이지만 그 기저에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관료 주도의 발전국가 모델과 토건국가의 한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광범위한 자각이 깔려 있다(김영필 2009).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생활정치라는 담론이 보편화된 데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던 국가와 시장 주도의 고도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양적·물질주의적 성장 중심의 발전에 대한 피로감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정해구 2009).

둘째 정치적 배경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다. 현대 세계는 화폐와 관료제의 복합체에 의해 점차 지배되면서 시민들의 자율적 생활세계는 점차 소외되어 식민화 또는 사화(privatization)되었다(하버마스 1981, 73). 버바(Verba)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와 참여의 평등인데,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우렁차고 간혹 분명하게 울려 퍼지지만 일상 속에서는 대부분 잠잠하며 더욱 통탄할 일은 거의 동등하지 않다. 다원주의의 경우 압도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전문직 등 특수 이익집단이, 민주적 조합주의에서는 조직 자본과 노동의 목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NGO의 번성조차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 기회의 증진보다는 일부 교육받은 중산층과 전문직 명망가들이 최대 수혜 계층으로 부상하였다(Hudock 1999, 4). 결론적으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선거를 제외한 일상 속에서는 주인공이 아닌 관객으로 전락하였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관객 민주주의이자 극장 국가라 할 수 있다(이시재 1995, 115). <표3>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인데, 최근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의 63%와 18대 총선의 46%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 기록이었다.

〈표 3〉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 (단위: %)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대선	89.2	81.9	80.7	70.8	63.0	
총선	75.8	71.9	63.9	57.2	60.6	46.3

출처: 중앙선관위 역대선거정보검색시스템(<http://www.nec.go.kr/sinfo>).

이러한 배경을 갖고 탄생한 생활정치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철학적 원리 또는 이론적 지향을 갖고 있다. 첫째는 노동이나 국민, 유권자가 아닌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성찰적 시민’을 설정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일차적 주체는 물질과 풍요를 중시하는 근대적 생활방식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더 많은 일상의 선택을 주창하는 시민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정치는 생태위기와 권력집중이라는 중심 고리에 대한 ‘시민적 삶의 운동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하 2005, 10). 또한 생활정치는 관객이나 응원 부대가 아닌 시민자치의 원칙과 생활우선주의에 근거하여 시민생활 중심으로 정치와 행정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시재 1995b, 116). 일본의 대리인 운동을 고안하였던 와타나베에 의하면 대리인운동의 본질 중 하나는 ‘시민에게 정치를 되돌리는 정치의 시민화 즉 시민의 정치화이다(渡辺登 1995b). 생활정치의 가장 구체적 형태인 지역 네트워크 운동은 ‘의원과 후원회’라는 종래의 정당 정치의 형식이 아니라 ‘대리인과 지역네트’라는 문제해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프로 정치가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신탁, 위임하여 그 정치가를 응원하는 정치에 대한 자기반성이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정치가에게 지역이나 집단의 운명을 맡겨 분배정치나 이권정치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대신에 지역 네트워크 운동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지만 성실한 활동을 통하여 발견되

는 정치적 과제를 대리인이라는 파이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역할분담이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한 문제해결방식에서는 정치가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정치적 요구가 선행하였다(박희숙 2009). 결국 생활정치의 원리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 선택을 증진시키는 시민주도의 정치, 시민연합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생활정치는 기존 정치에서 배제되었거나 간과되었던 정책 영역과 의제를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기든스는 생활정치의 본질을 선택에 관한 정치, 삶의 결정에 관한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기든스 1997a, 339). 이때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중요한 계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윤리적 도덕적 성찰이다. 생활정치는 지구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생활형식의 창조를 강조한다.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기반에 대한 성찰은 새로운 의제들을 정치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다. 체계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자아의 성찰적 기획은 먼저 경제성장 과정을 너무 우선하지 않음과 동시에 개인의 생활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생활정치는 기존의 ‘족쇄 풀린’ 경제축적이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위협하거나 파괴하여 왔음을 자각하고 대신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보상의 극대화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삶의 방식 즉 탈 결핍경제를 선택한다(기든스 1997b, 119).

생활정치의 의제 또는 생활정책은 해당 사회의 조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생활정치가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의제는 생태와 평화이다. 지구 생태와 핵전쟁의 위협에 맞서 개인적 행위를 훨씬 뛰어넘은 차원에서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며 모든 개인도 이러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기든스 1997a, 350). 자연과 전통의 보전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즉 기든스가 말하는 자연

의 인간화(기든스 1997a, 121)는 생활정치의 모두는 아니지만 필수적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전문가 영역으로 방치되었던 생물학적 재생산, 즉 생명의 권리, 낙태, 유전자 등의 문제는 생활정치의 새로운 의제가 된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김지하(1996)는 생활정치를 더 철저하고 본격적인 생명운동이자 자치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태와 평화는 철학원리를 넘어 생활정치의 구체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어 왔다. 먼저, 생활정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녹색당을 환경운동에 한정된 정치적 결사체로만 이해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다. 유럽의 녹색당은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에 근거한 것이지만 동시에 분권과 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핵심 축으로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 안에는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반핵반전단체·지역주민운동·여성운동 등 다양한 급진적 대안 그룹이 결합되어 있다(Bomberg 1998, 83). 일본 가나가와 지역의 생협 운동과 대리인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1982년의 합성세제 추방 및 친환경 비누 사용 운동이었다.⁴⁾ 일본의 지역 네트워크 운동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아 구석에 밀려나있던 생활 과제인 쓰레기, 안전, 고령자 복지, 어린이, 환경 등의 과제였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주민들의 토론과 조사를 통해 지방의원과 의회에 이러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고 점차 의회의 중심 과제로 만들어 갔다(박희숙 2009).

셋째, 생활정치는 소통과 연대, 분권과 자치의 가치를 중요하게 제창

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한 시민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복지, 쓰레기, 환경, 물, 교육, 먹거리, 원자력발전 등 우리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는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뿌리에 있는 것은 우리들을 둘러싼 산업중심주의적인 사회 그 자체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생활의 질을 문제 제기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지향하는 도전을 계속함과 동시에 그러한 시민을 지금보다 더 늘려가지 않는 한, 세상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가나가와네트워크 2000).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생활정치는 기존의 공공성 주장과는 상이한 입장에서 있다. 과거의 이론들은 공공성을 공식적인 것(officialness)으로 국가 또는 정부의 범역 내에서 이뤄지는 권력과 권위의 공식적 행사와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하여 왔다(백승현 2002, 222). 그러나 생활정치에서 공공성은 시민의 합리적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행위의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고 각각의 행위를 자기 제한하는 것, 즉 시민적 공공성으로 이해된다.⁵⁾ 시민적 공공성은 시민들의 소통을 통해 의제의 타당성이 공유될 때 여론으로 형성되며, 시민들이 생활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의 정당성을 여론을 통해 묻는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진다(송정기 1995, 74-75). 한국의 경우 생활정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소통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생활정치는 “개인(주민)의 삶이 뿌리내리고 있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 개인(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나 소통의 제도적 장치”이다(강대인 1998, 31). 김홍우는 소유가 소통을 지배하는 현실(real) 정치와 소통이 소유를 지배하는 참된(true) 정치를 구분하고 있는데, 생활정치는 소통이 공적 영역을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참된 정치이다(김홍우 1998, 117).

분권과 자치는 생활정치가 실천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이자 활동의 주요 무대이다. 왜냐하면 분권과 자치의 실현 공간인 지역은 일상의 교류와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이자 생활상의 이익과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정치는 분권과 자치의 원리를 지역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생활정치의

⁵⁾ 시민적 공공성을 강조하는 생활정치는 국가의 기능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나 자유 다원주의가 국가기능의 축소를 통해 공공 서비스와 공적 규제를 줄이려 한다면, 생활정치는 그와는 반대로 공공영역의 축소가 아니라 시민들의 대화와 토의를 통한 실질적인 활성화와 확장을 추구한다.

일차적 조직 형태는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의 수평적 네트워크이다. 지역의 자치조직은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주민의 연대감과 주체의식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생활세계를 복원한다(송정기 1995, 77).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지역조직은 단순한 저항이나 대리인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의 자치능력(empowerment)의 강화를 가져온다.

2) 한국적 특성: 담론 형성 과정의 소통의 단절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생활정치는 아직 완벽한 체계를 갖춘 이론이거나 운동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배경과 지향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흔하게 주장되는 것처럼 생활정치는 단순한 미시 정치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등치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기든스와 하버마스의 생활정치는 세계화에 따른 성찰적 시민들의 협력과 연대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의 정치는 생활정치를 어렵פות하게 예시하는 것일 뿐 여전히 해방정치와 더 가까이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위계적 권력정치나 계급·지역·민족 중심의 분할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기든스 1997a, 340).

한국에서 하나의 담론으로서 생활정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의 단절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생활정치의 일차적 원리로 소통이라는 가치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역설적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바는 생활정치는 시민운동 활동가의 전유물도, 기성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도, 세계적 석학의 고매한 이론이

아니라 시민사회-정치사회-학계의 이론과 실천의 협력의 결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이다.

먼저 최근 집권한 일본의 민주당과 생활정치의 관계를 살펴보자. 현재의 민주당은 1996년 9월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제1야당인 신진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극을 목표로 창당(간 나오토·하토야마 유키오 공동대표) 하였으며,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10년 후 당을 해산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때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의 창립자이자 고문인 요코타 가즈미가 민주당 창당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가나가와 네트워크 간 정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계약의 주된 내용은, ① 여성 의원을 늘리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정치를 전환하기 위해 NPO, NGO, 협동조합 등의 시민섹터 형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다. ③ 생활복지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가나가와 NET」, 1996. 10. 5).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네트가 추천하여 출마한 시민운동 후보는 13명이었지만 당선자는 2명에 불과하였다. 참혹한 결과에 실망하여 이후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전국정당의 실험을 접고 다시 시민의 정부 노선. 즉 지역 정당을 통하여 지역정부를 수립하는 원래의 목표에 전념할 것을 결의하였다.⁶⁾ 그러나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민주당의 연대는 일본의 생활정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정치가 일반 시민과 유권자에게 익숙한 정

⁶⁾ 민주당과의 정치계약에 대해 지역운동의 개성과 특성의 상실을 우려한 일반 회원과 지역 네트의 반발은 극심하였다. 당시 실패의 원인으로는 정치계약을 알리기보다는 급박한 선거 국면의 당원 가입 방식이라는 참여의 방법, 발언권은 있으나 결정권이 없는 참여의 정치적 유효성, 민주당의 변질 가능성과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무관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박희숙(2009)을 참조.

치담론으로 자리 잡았고, 민주당을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 오고 있는 1998년 민주당 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민주당의 『기본 이념과 정책』은 자신들이 대표해야 할 세력을 “지금까지의 기득권의 구조로부터 배제되어왔던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표”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다섯 가지로 구성된 기본정책 분야 중 국민생활분야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고용 및 노동, 남녀공동참가, 교육, 과학기술 및 예술문화, 인권, 환경, 재해대책, NPO 등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2007년 참의원 선거와 2009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민주당의 메인 슬로건이 탄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을 요약한 것이 <표4>이다.

〈표4〉 민주당의 생활정치 관련 슬로건의 변화

선거 (당 대표)	슬로건	선거결과
2003년 중의원 총선거 (간 나오토, 菅直人)	강한 일본(強い日本をつくる。) 안심할 수 있는 사회 (安心してできる社会のために)	137→177
2005년 중의원 총선거(오카다 카츠야, 岡田克也)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일본쇄신 (国民のための新しい政治、日本刷新) 일본쇄신, 정권교체 (日本刷新、政権交代へ)	177→113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郎)	국민의 생활이 제일(国民の生活が第一) 불안한 기득한 일본(日本には不安がいっぱいです。) "생활"을 뒤흔드는 연금, 보육, 농업 (生活を揺がす年金、子育て、農業)	32→60
2009년 중의원 총선거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국민의 생활이 제일(国民の生活が第一). 정권교체(政権交代)	115→308

출처: 김영필 2009.

정치담론의 형성에서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의 싱크탱크로 구성된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영국 노동당이다. 주지하다시피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주도하였던 신노동당 프로그램 혹은 블레어 프로젝트는 보수당 집권 15년을 종식시켰다. 노동당의 집권 방안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생활정치 이론을 체계화한 기든스를 비롯한 진보 지식인 그룹이 주도하였는데, 여기에는 노동당의 전면 개혁과 집권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영국(New Britain)의 담론과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일하는 복지(welfare-to-work), 최저임금제도와 사회현장 채택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윤용희 2002, 134-140).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생활정치라는 담론생산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의 분리, 학계와 정치권의 단절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였던 대화 포럼이다. 1990년대에 들어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개혁 지향적 사회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삶의 정치’를 화두로 8년간 콜로키움을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을 걸쳐 『주민자치, 삶의 정치』(1995),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1998),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2003)라는 생활정치 3부작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공동 작업의 결실로 생활정치의 원리로 생명과 자치, 소통을 내걸었고 민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운동 담론으로서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론적 완결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 먼저, 이론적 수준에서 이 작업에 참여하였던 각각의 연구자들은 제각기 다른 생활정치의 개념과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생활정치의 보편적 원리와 특성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아울

러, 정치담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공동의 접근방법과 구체 정책 개발을 생략함으로써 생활정치 연구가 아닌 순수한 한국의 시민사회사 연구가 되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시민사회나 정치권과의 단절적 소통 방식 때문에 이론을 실천하고 매개할 정치적 조직과 사회운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정치담론의 수준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네오콘이, 한국의 선진화에는 뉴라이트가, 오바마에게는 무브 온이, 일본 민주당의 선전에는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있었다. 아직까지 한국의 생활정치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운동의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관계 속에서 체계적 이론이나 독자적 운동으로서 독자적 위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생활정치 담론의 과제와 전망

한국에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론적 수준에서나 실천 수준에서 생활정치의 정립과 경험의 축적은 대단히 일천한 상황이다. 앞서 대략 살펴본 것처럼, 생활정치는 나름대로의 외연과 내포를 갖고 있다. 유럽의 경우 생활정치는 산업화 시대의 기존 권력정치와 노동정치에 맞서 시민들을 주체로 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분권정치를 지향하여 왔다. 이웃 일본에서 생활정치는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정치와 대립되는 환경과 복지를 지향하는 주부와 지역주민(생활자) 중심의 참여운동의 맥락에서 발전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생활정치는 그것의 이름이 갖고 있는 참신성에 매혹되어 여기저기서 호명되고 있지만 아직 일시적 유행 이상의 내용적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시민운동가들은 분권과 참여의 일본 모델을 따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민주 對 반민주

의 정치균열을 뛰어 넘을 탈이념의 중도정치이자 환경, 복지, 여성 등 특정한 정책의제의 전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하버마스과 기든스의 영향력으로 성찰적 시민들이 심의적 대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통의 정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단계에서 가장 급한 과제는 한국형 생활정치를 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제가 요구된다.

절실한 것 중 하나는 담론 형성과 실천을 위한 정치권-시민사회-학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특히 진보진영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지식인-시민단체들은 연대와 소통을 통해 미래 담론을 제시하고 대안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내부 비판에 치중하였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분열과 고립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장의 선거법 이슈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보적 시민단체와 학계는 완전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상적 제도로 선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와 행정학계는 정당공천제의 전면 폐지를 내걸고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지만 정당과 정치학계는 책임정당정치를 이유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의 유망한 담론으로서 생활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정치사회, 시민사회, 지식인사회의 생활정치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와 체계적 이론화는 첫 번째 과제이다.

둘째, 생활정치의 원리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상징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일본의 경우 민주당은 이번 8.30 총선을 ‘생활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로 규정하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거의 중요 이슈가 된 것은 2003년 중의원 총선거가 그 효시였다. 당시 민주당의 대표였던 간 나오토는 매니페스토의 내용으로 선거를 치렀다기보다는 매니페스토 그 자체를 가지고 선거전에 임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은 자유당과의 통합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40석의 의석을 늘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슬로건은 여전히 생활정치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구호이고, 또한 야당의 슬로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국가 중심적 사고가 강하였다. 그러나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슬로건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6년 4월 민주당의 당 대표로 취임한 오자와 이치로는 전략과 꿈수에 능한 노회환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메인 슬로건으로 사용한 것은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에게 비례대표 득표수, 전체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등 모든 결과에서 자민당을 압도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자민당은 “성장을 실감하게”라는 50-60년대 산업화시대의 슬로건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 그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진 것이다.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총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메인 슬로건에 더해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웠고, 자민당은 “일본을 지킨다.”, ‘책임력’이라는 너무나도 애매한 표현으로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였다(김영필 2009).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 또는 철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가 보수당의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사민주의를 몰라도 복지정책의 확대나 노사정위원회가 사민당의 노선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상이나 선거과정에서 생활정치를 대표할 상징 정책과 공약이 부재한 상황이다. 생활정치를 철학적 원리

나 정치이념으로 승인하고 있는 정당-시민단체-지식인 사이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들 세 주체가 모여 ‘생활정치 지표’를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생활정치와 정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이다. 생활정치가 정치 담론인 이상 독자적 정당이든 기존 정당과의 연계이든, 로컬이든 전국 정당이든 어떤 형태로든 정당이나 선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생활정치를 둘러싼 정당과 시민단체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95년 지방선거 패배 직후 생활정치를 내걸고 전국정당화를 시도하였던 시민운동 세력(National Local Network of Japan, 이하 J네트)들은 이후 중앙수준에서의 정치실험을 접고 다시 지역으로 복귀하였다.⁷⁾ 당시의 실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과 지역 네트워크 운동 사이에 실질적 정책차이가 존재하였고, 또한 민주당의 하부 지역 조직으로의 편입은 시민운동 고유의 개성을 말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이 수십 년 동안 다져온 ‘생활정치가 정당정치로 포섭’되었다는 것이다(박희숙 2009). 정치 담론과 사회운동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과의 관계 설정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그렇고 환경운동이 그러하였다.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의 경쟁과 실험이 바람직하다. 정당은 중앙당 수준에서는 생활정치의 이념과 원리를 체계화하고 지구당 수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실천을 하는 역

7) 결국, 지역네트워크형국정정당 설립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민주당 가나가와에 대해 로컬파티로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에 실패한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다음과 같은 총괄을 했다. ‘민주당이 결성됨으로써 로컬파티연합에 의한 내셔널파티를 만드는 데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로컬파티는 로컬정부를 수립하여 로컬정권을 만드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2002).

할 분담이 필요하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민운동은 생활정치를 풀뿌리 수준에서 착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의 조직적 형태는 일본식의 지역 네트워크일수도 있고, 풀뿌리와 네티즌을 결합하는 미국식의 넷루츠(Netroots)일수도 있다. 생활정치를 둘러싼 정당과 시민운동, 학계의 유기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생활정치가 한국정치의 구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한 길잡이가 될지, 또 그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생활정치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치의 흐름은 생활정치가 지향하여 온 분권, 자율, 참여, 생태,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낡은 사회를 고민하고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관심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생활정치를 향한 이론적 정립을 고민하고, 이를 채울 수 있는 현실 적합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2009년 9월 10일 접수, 2009년 11월 16일 채택)

참고문헌

- 강대인. 1998. “삶의 문화, 삶의 정치: 새 문화를 여는 또 하나의 대안.” 정문길 외. 1998.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대화출판사.
- 김영필. 2009. 10. 7. “일본 민주당과 생활정치.” 생활정치연구소 제8회 생활정치포럼 발표문.
- 김지하. 1995. “변화의 물결과 민의 대응.”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김홍우. 1998. “정치란 무엇인가, 소유에서 소통으로.” 정문길 외. 1998.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대화출판사.
- 김홍우. 2003. “단편 사회와 소통의 정치.” 김홍우 외. 2003.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출판사.
- 김홍우. 2003. “듀(duo) 프로세스와 한국정치의 재조명.” 김홍우 외. 2003.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출판사.
- 김홍우 외. 2003.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출판사.
-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999.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8. 『제3의 길과 생산적 복지』.
- 박승관. 2003.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 김홍우 외. 2003.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출판사.
- 박찬욱. 1998.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도 연대운동.” 정문길 외. 1998.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대화출판사.
- 박희숙. 2005. “지역네트워크 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소시오 로고스』. 29.
- 백승현. 2002. “한국의 시민단체(NGO)와 공공성 형성.” 『시민정치학회보』. 5.
- 송정기. 1995. “공공성의 구조전환과 주민자치.”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신동훈. 2005. “인터넷, 이야기, 그리고 생활정치: 네티즌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학적 고찰.” 『민족문화사연구』. 27.
- 앤소니 기든스 지음. 권기돈 옮김. 1997a.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 앤소니 기든스 지음. 김현욱 옮김. 1997b.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 오재식. 1995.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오재환. 1996. “일상생활의 구조와 생활정치.” 『사회조사연구』. 11(1).
- 윤용희. 2002.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이구. 2007. “21세기 한국민주주의와 중도 정치이념: 민주당의 생활정치 분석을

- 중심으로.” 『아태연구』. 14(1).
- 이기호. 2003.6.17 “삶의 정치, 녹색자치와 여성.” 지역정당, 일본 가나가와 네트
워크 운동의 사례.” 여성환경연대 월례포럼 자료집.
- 이병천. 1995. “자본주의의 두 가지 모순: 노동정치와 생활정치.” 『동향과 전망』.
28.
- 이시재. 1995. “삶의 정치와 공공성.”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이시재. 1995. “시민 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민자
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이시재 · 이종구 · 장화경. 2005. 『사회학으로 풀어본 현대일본 사회』. 일조각.
- 이신행. 1995. “사회적 권력의 형성과 민회 조직.”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
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장미경. 2002.봄. “생활정치와 페미니즘, 생활자치운동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통권52.
- 정해구. 2009.6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생활정치연구소 창립 심포지움 자료집.
- 정문길. 1998. “삶의 정치, 정치 개념의 새로운 규정을 위한 일 시론.” 정문길
외. 1998.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대화출판사.
- 정문길외. 1998.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대화출판사.
- 정수복. 1995. “현실 정치와 시민운동.”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민자치, 삶
의 정치』. 대화출판사.
- 최병두. 1998. “삶의 질로서 공간환경과 생활정치.” 『사회과학연구』. 16(3).
- 하승수. 2002. “일본의 지역정당(Local Party) 운동과 대리인 운동.” 시민자치정책
센터.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자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갈무리.
- 홍일표·하승수. 2004. “시민참여의 한일비교: 제도와 운동의 동학.” 주성수 편.
『정치과정에서의 NGO』. 한양대학교 출판부.
- 크리스찬아카데미. 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 渡辺登. 1991, "地方自治における 生活者政治の可能性" 『都市問題』第82卷

第10号. 東京市政調査會

渡辺登. 1995, "生活者政治の現況とその意味." 『都市問題』第86卷第7号. 東京市政調査會

神奈川NET. 2000. <神奈川NET2000 衆院選・活動記録>.

Bomberg, Elizabeth. 1998. *Green Parties and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Routledge.

<언론자료>

이해찬, “진보세력 생활정치로 천착해야.” 『연합뉴스』. 2009. 5. 16.

『한겨레신문』. 1998. 8. 16.

The Study on Life Politics as a Political Dialogue

Sang-Ho Jeong

This study concentrates on dialogue analysis of Life Politics in Korea which occurred as a new political trend. While many studies are devoted to explain life politics of Japan and Western countries, relatively little scholarly attention was been given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and figures of Korean life politics. In an effort to fill this gap, this study found three main routes which have affected Korean life politics. First, Japanese life politics have an effect on Korean civil organizations which emphasize on civil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Secondly, the discuss of academic world in Korea have been effected from the theories of Jurgen Habermas. Thirdly, the investigation of Anthony Giddens exert influence o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 in Korea which commonly regard life politics as non-ideological, apolitical and pragmatic policy.

Key words: life politics, Jurgen Habermas, Anthony Giddens, choice, participation, publicness